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위메프 티몬사태 영세사업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가·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올해 8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 10→50억원으로 완화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방법,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각 안내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결정고시...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회되자마자 1만~1만 20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